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 분쟁 시나리오와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

홍 봉 기**

목 차

- I. 서론
- II. 적정 군사력 건설의 이론적 고찰
- III. 통일 이후 한반도의 위협평가와 전쟁 양상
- IV. 주변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수준 분석
- V. 분쟁시나리오를 통한 적정 군사력 판단
- VI. 통일한국의 군사력 운용
- VII.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속에서 통일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과 자주적 방위를 확립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 홍봉기의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8. 22)를 정리하였음.

** 군사학과 박사, hong23737@hanmail.net

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 통일 후 자주적 방위를 위한 준비는 자원과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 안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와 군사전문가들이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과 적정 군사력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통일 한국의 군사통합 방안, 동맹관계를 통한 한반도 안보 유지 방안, 통일 후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에 따른 군사력 건설방안 등에 치중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적정 군사력들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비한 군사력이거나 동맹전력을 포함한 전력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한국이 주변국과의 전면전에서 우위를 달성하는 것은 주변국들의 전체적인 군사력 수준이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주변국과의 군사분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판단하여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연합전력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관계 속에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문제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해서 주둔한다 하더라도 주변국과의 군사분쟁 시 동맹군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통일 한국의 안보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존하여 유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의 자위적 안보태

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교차되는 반도 지역으로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열강들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으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 왔으나 주변 어느 국가도 한반도가 어느 한 국가에 예속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세계의 화약고’ 이면서도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한 역학관계에 있다. 즉, 동북아시아는 국가 상호간 협력 관계가 증대되고 있으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과 갈등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보통국가로 지향하며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 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강대국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통일 후 북한과의 군사통합은 일반적인 사회통합에 비해 제한적이며, 복잡하다. 또한 군사통합은 다른 분야의 통합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남북한의 군사통합을 통해 정상적인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후 빠른 시일 내에 군사통합을 통한 통일 한국군의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군사체제하에서 군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통합은 군 조직, 기능 및 제도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결국 통일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통일 후 군사통합에 의한 군사력 건설도 중요하지만 통일 전부터 통일 후의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통일 후 한반도는 완충지대 없이 주변 강대국들과 직접 접촉하고 경

쟁해야 할 것이다. 통일 후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과 통일 한국의 자주적 방위를 확립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판단해 봄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통일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준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전략도 현존 위협인 대북한 위주로 치우칠게 아니라 통일후 예상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전략을 연구 발전시켜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위충분성은 동맹전력을 배제한 독자적인 전력을 통한 방위충분성을 뜻한다. 통일 한국이 주변국과의 군사분쟁에서 독자적인 전력 우위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분쟁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군사력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만이 최소의 전력 소요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적정 군사력은 제한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최소의 전력을 통한 방위충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과적인 군사전략을 판단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은 주변국들의 전체적인 군사력 수준이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절대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상대적 균형전략은 절대적 균형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력을 유지했을 때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 시나리오를 통해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고자 한다.

넷째,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고, 각 군별 군사력 운용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적정 군사력 건설의 이론적 고찰

1. 방위충분성

방위충분성이란 불특정·불확실한 안보상황하에서 공존·공생을 추구하고 공격·침략적 의도는 없지만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국방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러면서도 충분한 수준의 군사능력으로 「군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¹⁾

이러한 방위충분성(Defense Sufficiency) 또는 비공세적 방위(Non-Offensive Defense: NOD)개념은 독일의 분단 상태에서 구서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온 안보이론이다. 즉, 한 국가가 상대방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여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자하는 배경에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 적용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²⁾’ 개념이다. 이는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변혁을 시도하면서 군사력 건설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때문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1) 대한민국육군, “통일대비 군사력 건설방향 제정립”, 육군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2000, p. 9.

2) Dover Publications, Dictionary of Spoken Russian : Russian- English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Inc. 1990), p. 464.

출발하였다. 따라서 당시 소련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은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합리적 충분성’을 새로운 방위개념으로 적용하면서 ‘방어적 충분성’ 또는 ‘합리적으로 충분한 방위’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³⁾ ‘합리적 충분성’ 개념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리적 비용에 근거하여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어적 방어(Defensive Defense)’에 중점을 두는 방위 충분성 개념이다⁴⁾. 이는 라이너 후버·제넷·자로슬로스키(Reiner I. Huber, Gernot Friedrich and Jaroslowski Leszczelowski) 등이 개발한 안정성 모델을 기초로 하여 러시아의 츠지코(Tsygichko)가 러시아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하여 발전시킨 이론으로 러시아의 지리적 실정에 맞는 적정한 군사력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셋째, 라이너 후버(Reiner K. Huber) 등 학자들이 ‘안정과 균형’, ‘지역안정비율’ 등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안정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 안정성 모델을 개발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력을 준비하는 ‘최소한 작전소요 군사력 건설⁵⁾’ 개념이다. 즉, 군사적 안정성에 기초하여 군사력을 건설하는 ‘안정적 방어’개념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

3) Dover Publications,, 위 논문, p. 464. 당시 소련 전략가들은 서유럽과의 군비경쟁으로 핵전이나 채래전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당시 심각해지고 있었던 경제적 위기감이 소련 지도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혁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군사 분야의 비효율적인 투자와 운영에서 국방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4) Reiner I. Huber, Gernot Friedrich and Jaroslowski Leszczelowski , "A New Paradigm for Estimating Russian Force Requirements? On Tsygichko's Model of Defense Sufficiency", European Security, Vol.8, No.3 (Autumn 1999), pp. 102-123.

5) Reiner K. Huber, "Parity and Stability: Some Conclusions from Geometrical Models of Military Operations in Central Europe", International Interaction, Vol. 16, No. 4, (C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1991), pp. 225-238.

우 진수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갖춘다는 ‘기본적 방위력’ 개념도 방위충분성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⁶⁾

한 국가에 있어서의 방위 충분성에 대한 수준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주변국들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외교 및 안보 수준을 말한다. 둘째, 국제정치 사회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교 및 안보 수준을 말한다. 셋째, 주변국들과의 무력충돌에 의한 국지·제한전시 우리의 독자 능력으로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말한다. 넷째, 주변 1개국과의 전면전 발생 시 다른 주변국과 동맹 또는 연합하여 방어를 할 경우 국토와 주권을 확실히 방위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을 의미한다. 위의 네 가지 방위충분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을 살펴볼 때 세 번째의 방위충분성에 대한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변국들과의 상관관계와 동맹관계에 의해서 유동적일 수 있는 방위충분성이다. 결국 통일 한국의 방위충분성은 독자적인 능력으로 적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이며, 이러한 군사력 수준만이 진정한 방위충분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충분성 전력이라 함은 적의 침략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 적정수준의 전력을 의미한다.⁷⁾ 즉, 한 국가가 상대방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여 적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 방위충분성은 통일 후 통일 한국이 주변 강국에 대한 상대적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고 가장 비용효과적인 군비강화의 최적치⁸⁾를 이루기 위해 선행되

6) 박광철,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과 적정 군사력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p. 18-21.

7) 김강녕, “방위충분성 전력의 건설과 향후과제”, 「전략논단」 2005년 봄여름호 (통권 제2호),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5, pp. 88-92.

8) 정옥임,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

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한 국가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판단은 크게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며, 적게는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위의 네 가지 군사능력 수준 중에서 세 번째 주변국들과의 무력충돌에 의한 국지·제한전시 우리의 독자적 능력으로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 한국에 있어서의 방위충분성은 제한된 자산으로 통일 후 잠재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고, 작전 및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상대적 균형 전략

2.1 이론적 배경 : 세력균형이론

상대적 균형전략의 이론적 배경은 ‘세력균형이론’이다.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체제 현상을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현실주의는 국제체제 현상을 힘의 정치로 보고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을 무정부상태의 국제질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권력투쟁이 발생하는 요인을 불평등한 권력의 분배로 보고 있다.

월츠(Kenneth N. Waltz)는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세력균형이론을 정립하였다. 월츠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가마다 능력이 다르고, 힘의 분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힘의 균형’과 ‘균형의 유지’를 통하여 생존과 안전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⁹⁾ 월츠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6, p. 3.

9) Kenneth N. Waltz,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9), pp. 199-204.

의 세력균형이론을 바탕으로 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 스웰러(Randall L, Schweller),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등 여러 학자들이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을 근거로 하여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로 국가생존에 있어서 주요 변수를 군사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어샤이머는 강대국들이 생존보장과 상호간에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힘의 경쟁(군사력 경쟁)을 하며, 궁극적으로 패권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국가는 다른 나라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패권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

일본의 기꾸찌 히로시는 『戰略基本理論』에서 세력균형을 위기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기란 분쟁과 전쟁상태와 구분이 되며, 양국 간에 첨예한 의지의 대립으로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국제 사회적 환경조건을 지칭한다. 위기관리는 역사적으로 ‘힘의 이론’에 따른 ‘억지’ 또는 ‘화해의 방향을 모색’하는 ‘힘의 정책’이라고 했다. 따라서 군사력이 작은 국가는 타국과 동맹 등에 의해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즉, 군사력을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세력균형의 이론에 따르는 ‘힘의 정책’이다.¹¹⁾

이러한 세력균형이론은 국내외 정치 및 안보분야에서 ‘힘의 균형’, ‘적정 군사력 수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0) 이근욱, 『월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p.85-87.

11) 기꾸찌 히로시, 『戰略基本理論』 (東京: 内外出版株式會社, 1980), 국방대학원 역, 『戰略基本理論』 (서울: 국방대학원, 1993), pp. 104-144.

2.2 세력균형의 의미

세력균형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력균형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체제에서 두개의 정치집단이 자신의 생존과 힘의 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치군사적 제휴의 결과 서로 대등한 힘을 가진 세력군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둘째, 특정국가의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생존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개입, 분할지배, 보상, 동맹체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력’ 즉 ‘힘’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고, ‘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력균형은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¹²⁾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무력(force)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폭력(violence)이라는 그림자 속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이러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 의해 국가의 생존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힘의 사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국제체제에서의 국가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체제에서의 자조(self-help)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각국은 상대국 의도와 행동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존을 위해 자조와 힘의 우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¹³⁾

세력균형은 ‘힘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균형 유지는 유지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은 ‘적대국’, ‘잠재적 위협국’ 등이 될 수 있

12) 김태현, “세력균형이론”, 우철구의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04), p. 82.

1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 103-116.

을 것이다. 즉 균형유지는 상대인 ‘적대국’, ‘잠재적 위협국’에 대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상대적 균형전략을 설명함에 있어서 세력균형이란 ‘힘의 균형’을 의미한다. 즉 세력균형은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독자적인 힘이나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적대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과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세력균형이론에서 군사력의 의미

세력균형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는 ‘힘(power)’이며, 따라서 국제체제는 ‘균형된 힘(balanced power)’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힘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균형을 잃게 되면 국가 간 분쟁이나 전쟁을 발발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자기보존을 위해 독립된 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¹⁴⁾

월츠는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힘을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힘의 추구는 ‘적정 수준의 힘’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어샤이머는 세력균형에서의 힘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핵심요소는 군사력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어샤이머는 강대국의 기준을 상대적인 군사 능력(relative military capability)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군사력 운용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 국가는 침략국과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며, 공격보다는 방어 군사력 균형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어샤이머도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군사력의 균형이 다른 요

14) 김명수, “세력균형과 상대적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 24.

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론에서의 군사력은 국가의 핵심적 힘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쟁에서 군사력은 무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 요소로 작용하고, 군사력의 불균형은 어떠한 힘의 불균형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다. 웨그너(Harrison R. Wagner)는 군사력은 짧은 시간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되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요소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군사력은 현재의 현실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력균형이론에서의 군사력은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생존보장을 위해 자기방어의 핵심적인 힘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균형은 곧 군사력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2.4 상대적 균형 전략에 관한 이론 재규정

세력균형이론은 군사력을 세력균형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데, 그 이유는 군사력이 국제관계에서 궁극적인 힘으로 여겨져 왔고, 국제적 대립과 갈등이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결되어 왔기 때문이다.¹⁵⁾

일반적으로 ‘균형(balance)’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과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양이나 수 또는 1 : 1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정치에서의 ‘균형(balance)’이라함은 수준(level) 또는 범위(range)의 개념에서 ‘대등(even)’함을 의미한다. 통계학에서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두 집단 간 표본의 평균과 편차가 모집단의 분포도와 동일한 범위에 있을 때 동일하다고 보는 것과 같다¹⁶⁾ 따라서 ‘상대적 균형전략’은 잠재적국과 군사력 비교 시 수준이 대등하여 균형을 이룸으로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국가는 생존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힘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15) 이극린, 『정치학』 (서울: 법문사, 2000), pp. 720-721.

16) 김명수, 앞의 논문, pp. 41-42.

야한다. 한 국가가 상대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유지하기 위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군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상대국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대국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상대적 균형전략은 상대국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상대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는 군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두 가지의 전제 속에서 가능한 전략이다. 첫째, 상대적 균형전략은 전쟁보다는 국지전 또는 분쟁에서 전구(theater) 또는 전투(battle) 차원의 군사력의 균형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상대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은 국가 간의 총력전이다. 따라서 국가가 보유한 총 군사력을 비교 시에는 상대적 균형전략은 거의 불가능한 군사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군사력 비교 시 핵무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핵무기의 사용 자체가 상호간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균형의 논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군사력 측정요소에서 제외한다.

통일 한국이 주변국과 절대적 군사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통일 한국과 주변국과의 군사력의 격차는 좁혀지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주변잠재적국과 국지전에서 적이 제한적인 전력만을 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력전을 수행하여 각 국지전에서 상대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힘의 상대적 균형을 통해 군사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다.

통일 한국이 주변국과의 군사분쟁에서 절대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주변국의 전체적인 군사력 수준이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균형화 전략은 절대적 균형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제한적으로 상대적 균형화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즉, 통일 한국이 일본·중국·러시아와 국경선 지역에서의 영토 분쟁, 해양에서 도서 영유권 또는 해양 관할권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인한 무력 충돌 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영토를 방어하고 주권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적의 침략 및 도발 시 보유하고 있는 총 전력의 일부를 투사할 때 우리는 가용전력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켜서 적의 전력과 비교 시 최소한 동등하거나 우위의 전력을 투사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우위달성은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¹⁸⁾

군사전론가들 중에는 전쟁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집중’의 원칙으로 보고, 전체 군사력이 상대보다 열세에 놓여 있더라도 특정 장소·시점에서 상대보다 군사력의 집중도가 높으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기동에 의한 전투력의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전은 적을 원거리에서 신속히 탐지하여 정확히 원격으로 타격이 가능하며,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투효과’의 집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 한국에서의 군사 분쟁은 국지전의 양상으로 발발할 것이며, 주변국 어느 국가도 제한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밖에 없을

17) 신인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우리 해군의 대응 전략 및 전력 발전방향”, (대전: 해군 전력분석 시험평가단, 2011), pp. 60-70.

18) 김기주·손경호, “다차원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제문제연구」, 2013, pp. 162-165.

것이다. 또한 일본·중국·러시아와의 동시 다발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는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통일 한국과 비교우위에 있는 주변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상대적 균형전략’은 분쟁 발생 시 국지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핵심은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쟁 시 ‘상대적 균형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여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이다.

III. 통일 이후 한반도의 위협평가와 전쟁양상

군사전략은 안보위협을 도출하고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위협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위협평가란 안보의 대상인 적에 관한 평가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협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군사전략은 위협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러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상되는 위협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평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통일 한국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위협 중에서 주변국과 국가안보와 이익이 상충되어 내제된 갈등요소가 군사 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협 요인들을 평가해 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위협평가에 대한 관점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는 통일 이전과 변함없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통일한국에 대한 잠재위협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정학적 측면이다. 국가 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호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관계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 상호 발전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상호간에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일본과 중국·러시아가 남쪽과 북쪽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향 역시 남쪽과 북쪽으로의 선택적 관계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해양세력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전형적인 대륙세력이다. 따라서 각 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법도 상반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수동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 한국은 북쪽의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남쪽의 해양세력인 일본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적 측면이다. 역사는 한 국가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온 발자취이다. 역사적으로 양국가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과거의 역사는 양국 간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적 관계를 볼 때, 중국과 일본은 통일 한국의 잠재적 위협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략했던 임진왜란·정유재란과 1910년 경술국치 등의 과거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사에 대

한 양국 간의 골이 깊은 감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조그만 갈등의 씨앗이 군사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었다. 만주에 등장하는 세력은 반드시 한반도를 침략하는 역사적 정형을 보여 왔었다. 이는 ‘만주를 제압하는 국가는 동북아를 제압한다.’라는 견해¹⁹⁾도 있듯이 만주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역사는 대륙세력인 만주세력과의 끊임없는 투쟁과 극복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한 고구려사의 말살과 백두산 소유권에 대한 중국화 시도 등 갈등의 요소가 상존해 있다.

셋째, 국가 간의 관계 측면이다. 양국 간의 관계는 국가이익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상호 경쟁적 대립을 한다면 부정적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통일 한국을 둘러싼 상호간의 국가이익이 충돌할 때 해양경계분쟁, 해양자원분쟁, 환경분쟁, 항로통항분쟁 등이 상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 한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평가

통일 한국과 주변국과의 발생 가능한 분쟁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 이후 동북아의 한반도 주변국들 상호간에 직접적인 군사대결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 환경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상호간의 분쟁 위협들이 통일 한국에는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의 잠재적 위협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 규명에 따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지역세력 재편 과정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

19) 무라마에 모리미치, 『악의 논리』, 최현(역)(서울: 범우사, 1980), p. 172.

어 있다,

둘째,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 노력, 중국의 국력전반의 점진적 부상, 일본의 재무장과 침략적인 국가전략 지향,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진출의도와 극동 군사력 증강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은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주변국간의 이해 충돌로 발달된 전쟁이 한반도로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주변국들 상호간의 도서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통상, 자원(해양, 해저), 해상수송, 환경문제 등의 마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3. 통일 한국과 주변국과의 발생 가능한 분쟁요인

통일 이후 한반도 주변상황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군비확장,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군사강국 지향, 러시아의 새로운 군 건설 등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로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는 통일 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상호간의 역사적 문제, 지정학적 문제, 경제적 문제, 기타 국익을 위한 문제 등의 마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한국과 주변국과의 발생 가능한 분쟁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3.1 영토 및 민족 문제

중국과는 백두산을 비롯한 만주·간도 등 영토문제, 민족문제 등이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국경선 획정 문제는 다른 갈등에 비해 군사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본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백두산정계비, 청·러 북경조약과 청·일 간도협약 문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 등 북한지역의 일부를 중국에 복속시키려는 시도들은 양국 간에 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문제도 영토문제와 함께 통일 한국과 중국 간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 한국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중국내 조선족들의 통일 한국에 대한 열기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각성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민족문제도 하나의 갈등요소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3.2 해양경계 획정 문제

해양경계 획정 문제는 중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태평양을 연하는 아시아 지역은 ‘해양국가의 공동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지역내 국가 간의 해양경계 획정 논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이 해양법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²⁰⁾ 국가 간의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둘러싼 관할권 주장이 서로 중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경계획정문제는 통일 한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과 마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동아시아 수역은 북태평양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 폐쇄되어 있어서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할권을 주장할 경우 불가피하게 중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경제획정문제는 관할권 주장이 중복될 경우 마찰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해양경계

20)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는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경계선으로부터 12해리, 대륙붕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등이다.

획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¹⁾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대륙붕설로 영해 기준을 삼고, 한국은 양국 간의 중간선을 영해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서로 기준이 달라 해상관할권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서해지역에서 한국의 해저자원 개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서 해양자원 개발이 해양경계획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약 통일 후에도 통일 한국이 서해지역에서 해양자원개발을 계속할 경우 양국 간에는 해양경계획정문제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의 해역으로 넘어 들어와 조업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소한 무력충돌이 군사 분쟁으로 확대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3.3 도서 영유권 문제

일본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독도에 대한 통일 한국의 역사적·실효적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과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후 동북아지역 안보상황이 불안정하고 일본 내에서 보수우경화 흐름이 증대될 경우, 일본은 독도에 이르는 해양경로를 차단하거나, 독도를 점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지분쟁을 야기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서 영유권은 그 도서가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도서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경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서 영유권 분쟁은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큰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김정수, “동북아 해양의 불안정요인과 한국해군의 전략적 대응방안”, 「해양전략」 제18권 제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p. 204.

3.4 해상교통로(SLOC) 안전문제

아·태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무역을 위주로 하는 경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 물자수송의 주된 통로인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은 역내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해상교통로에 대한 개념은 본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작전부대와 작전기지를 연결하여 그 노선을 따라 보급품과 증원군이 이동하는 해상의 통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간의 무역이 해양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교통로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군사전략적 의미를 넘어 ‘해상에서 인원과 물자의 원만한 수송을 위한 체계적인 연결망과 시설’이라는 포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²²⁾

오늘날 해양이 물자수송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해상의 통로를 통한 국가 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도 해상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상 통로를 통한 원유 또는 원자재 등의 수입 자재 공급이 차단될 경우 해당국가의 경제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해상통로의 차단은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무역량이 증대될 것이며, 통일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 또한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무역에 있어서 해로의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라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4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양상

4.1 저강도 전쟁의 국지 분쟁

22) 이정윤, “통일이후 해양력 투사와 상륙전력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6, p. 48.

탈냉전 이후 핵전쟁이나 재래식 전면전의 가능성은 물론 이념 대립에 의한 소규모 대리전쟁의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저강도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여러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원인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강도전쟁은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저강도전쟁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프레크 킷슨 장군이 1971년 그의 저서에서 ‘저강도작전’이란 용어로 최초 사용되었다.²³⁾ 이어서 1980년대 초 미 육군 참모총장 마이어 장군이 무기의 치명률과 강도에 따라 국제분쟁을 분류하면서 저강도전쟁을 전면전 및 제한전과 함께 하나의 분쟁형태로 분류하였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강도전쟁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된 정치, 군사적 투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강도전쟁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교리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합참에서는 전쟁이외의 작전을 군이 국가 이익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는 제반 작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에 있어서의 저강도전쟁에 대해 정의를 해보면 ‘주변국가나 단체 및 개인이 무력도발, 테러, 정치·경제적 압력 등의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할 때 이러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로 계획화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저강도전쟁의 주요 유형은 테러, PKO, 국지분쟁, 내부분란 등이 있다. 이러한 저강도전쟁의 유형 중에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지분쟁이다. 국지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를 피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쟁지역, 분쟁수단, 분쟁목표 등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와 수준을 정하여 한계를 가지고 수행하는 분쟁”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통일

23) 최종철, “한국의 저강도분쟁 전략”, 『국방연구』 제42권 제2호 (서울: 국대원, 1999), p. 132.

24) 전원하(역), 『저강도 전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친구신서10, 1990, pp. 9-27.

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저강도전쟁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반도를 어느 한 국가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을 주변 어느 국가도 원치 않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주변 어느 한 국가와 전면전 형태의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변국들의 미래구도를 볼 때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가들 중 2개국이 동맹하여 통일한국에 대한 침략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어느 한 국가는 동맹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원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면전 보다는 주변국들이 개입을 하지 않을 정도의 국지적인 군사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4.2 최첨단 재래식 전쟁

한반도에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은 사용되는 무기체계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과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재래식 전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핵전쟁은 최악의 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며, 통일한국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동북아에서의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한반도에서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쟁양상은 고도로 발달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래식 전쟁은 첨단과학 및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무기체계를 이용한 전쟁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전개될 재래식 전쟁에서의 군사력은 첨단과학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도입한 전쟁수행개념이 개발되어 현재보다 현저히

25)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국방대학원, 2000), p. 93.

증대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통일 한국은 주변국과 도서 영유권, 국경선 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 관할권 문제 등 잠재된 갈등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과 주변국들의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군사적 충돌 형태의 국지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경선 분쟁은 중국이 새로운 국경선 획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거나, 현재의 실효적 지배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국경선을 침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경선 분쟁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인접국은 특정 지역을 지상화력이나 항공화력으로 타격하거나, 일정지역을 점령한 후에 정치적 협상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상호 군사력을 증원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무력충돌은 국지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도서영유권 분쟁은 통일한국의 실효적 점유의 효력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일본이 도서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분쟁화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를 강점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독도 근해에서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이 이러한 일본의 무력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 관할권 분쟁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을 둘러싼 상호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외교적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 관할권 분쟁은 인근 해역에서 해·공군력을 이용한 무력시위, 해상시설 점령, 해상봉쇄 등을 통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상호 전력을 투입하여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도서지역을 벗어나 한반도 본토로의 확산은 어려울 것이다.

도서 또는 해상에서의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전개될 수 있는 전쟁양

상은 먼저 우세한 해군력으로 해상주도권을 장악하여 해상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공군 및 유도무기를 주요 목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타격을 실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륙, 공정, 지상 및 공중기동부대가 도서를 점령할 것이다. 국경선지역에서의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에는 먼저 공군 및 유도무기에 의한 주요 목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타격을 실시할 것이다. 이어서 지상군에 의한 공격이 실시되고 동시에 공정, 상륙 및 공중기동부대를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을 점령할 것이다. 필요 시에는 해상에서의 봉쇄도 시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은 적국이 전략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표적에 대하여 타격을 하거나, 단기간 내에 국경지역이나 도서를 점령하거나 우리 영토내의 일부지역으로 진출하여 전략요충지를 타격 및 점령한 후, 정치적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양상을 볼 때, 적은 자국의 총 전력을 투입할 수 없고 제한적 군사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협소한 국토와 제한된 군사력으로 인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주변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수준 분석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할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기 위해 동북아의 주변국인 일본·중국·러시아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수준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 스스로의 방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의 공조 필요성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공감,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검토

등 미일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해양 및 영토주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후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일본은 본토 밖에서 적의 침략을 봉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수륙기동단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즉,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자위대의 전·평시 유용성을 확충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통치하 국제사회에서의 부상으로 국제적 위상에 부합되는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하는 등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부대를 감축하면서 군사적 효과성을 높이고자 첨단정보 하 국지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항공모함 배치, 전투기 성능 개량, 우주 과학기술 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과 군사력 증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현대화를 통하여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동북아에서 다자간의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나가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은 도서 영유권, 해양 관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해양자원 확보 등의 주변국과의 분쟁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과 주변국의 분쟁은 해상분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주변국의 해양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과 분쟁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표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 구 분 | | 일 본 | 중 국 | 러시아 | 통일 한국 |
|-----|-------|----------|------------|----------|---------------------|
| 병 력 | | 247,150명 | 2,333,000명 | 845,000명 | 1,830,000명 |
| 국방비 | | 510억 달러 | 1,122억 달러 | 682억 달러 | 305억 달러 (북한 미포함) |
| 육군 | 전차 | 777대 | 6,840대 | 20,155대 | 6,700여대 |
| | 야포 | 589문 | 8,320문 | 18,685문 | 14,200여문 |
| 해군 | 잠수함 | 18척 | 66척 | 53척 | 80여척 |
| | 해잠수함 | · | 4척 | 11척 | · |
| | 항공모함 | · | 1척 | 1척 | · |
| | 구축함 | 36척 | 15척 | 18척 | 15척 |
| | 호위함 | 11척 | 54척 | 9척 | 14척 |
| 공군 | 전략폭격기 | · | · | 141대 | · |
| | 폭격기 | · | 90대 | · | · |
| | 전투기 | 340대 | 1,505대 | 1,138대 | 1,220여대 |
| | 급유기 | 5대 | 10대 | 20대 | · |
| | 조기경보기 | 17대 | 8대 | 23대 | · |

* 출처: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36 ~ 239 내용 재정리

*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어 대략적인 수량으로만 제시

그러나 일본·중국·러시아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동향을 살펴볼 때, 통일 한국이 주변국들과 전면전을 상정하여 대등한 수준으로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군사력 수준을 비교해볼 때 그 차이는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주변국과의 전면전과 총력전을 상정한 군사전략보다 분쟁발생시 국지전과 제한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위전략은 ‘상대적 균형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균형전략’은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힘의 상대적 균형을 통해 군사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다.

V. 분쟁 시나리오를 통한 적정 군사력 판단

통일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시나리오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또는 제한전에 의한 인접국과의 영토분쟁, 도서 영유권 분쟁, 해양 관할권 분쟁, 해상교통로 및 해저자원 분쟁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들 중 주변 3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우선순위를 판단해 볼 때, 중국과는 국경지역에서의 영토분쟁과 이어도 관할권 분쟁,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 러시아와는 해상교통로 및 해저자원 관련 분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연구함에 있어 통일 한국이 주변 3국과 절대적인 군사력 비교 시에는 열세이지만 위의 네 가지의 분쟁에서 각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각 상대적 균형 내지는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의 최대공약수를 찾는다면 최소한 통일 한국 단독의 전력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국은 결코 주변 3국과 절대적인 전력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연구는 주변국과의 발생 가능한 분쟁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위게임을 통한 최적의 전력을 구상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의 영토분쟁과 이어도 관할권 분쟁,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러시아와는 해상교통로 및 해저자원 관련 분쟁 등의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군사력을 판단해 보았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은 제3호위대군, 제14호위대, 제2·4호위대군의 일부 전력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일본과 상대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해상 전력 수준은 이지스함 6척, 구축함 12척을 보유한 3개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전략기동함대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군사력 운용측면에서는 해군의 초동 대응을 위해 울릉도 해군 전진기지 구축, 공군의 작전반경 확대 및 작전반응시간 단축을 위한 공군기지 건설, 해병대 병력의 사전 울릉도와 독도에 전개 및 배치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과의 이어도 관할권 분쟁에서 중국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은 북해함대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 한국의 전력은 2개 기동전단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전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 2개 기동전단은 제주 강정기지에 위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중국이 북해함대의 랴오닝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발진할 경우 공군의 작전반응 시간을 고려하여 제주공군기지 확보가 요구되었다.

중국과의 한반도 북방 영토 분쟁에서 중국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은 주력부대인 선양군구 3개 집단군, 전략예비인 지난군구와 베이징군구의 각 1개 집단군, 응급기동전투부대·상륙부대·공수부대 등을 포함한 5개 사단 규모 약 33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군 위협대비 소요전력은 6개 군단 24만 명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중국군의 투입규모인 33만 명을 고려할 때, 공자 : 방자 비율은 약 1.38 : 1의 비율로 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일 한국은 중국과 군사력을 비교할 때 절대적인 전력은 약 하지만 공자의 중심을 직접 타격·마비시킬 수 있는 첨단 정보·기술 군을 육성하여 상대적으로 균형과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분쟁은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양상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통일 한국과 러시아와의 분쟁은 영토분쟁, 도서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 분쟁과 같은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점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해상에서의 자원 확보를 위한 분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과 러시아의 분쟁은 무력시위 형식의 군사력이 운영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개입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러시아가 투입하리라 예상되는 전력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해군 1개 전대 2척의 구축함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통일 한국의 전력은 나진항에 기지를 두고 있는 1개 전대 2척의 구축함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통일 한국이 주변 3국과 절대적인 군사력 비교 시에는 열세이지만 위의 네 가지의 분쟁에서 각각 상대적 균형 내지는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의 최대공약수를 찾는다면 최소한 통일 한국 단독의 전력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 한국은 결코 주변 3국과 비교 시 절대적인 전력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군별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VI.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운용

1. 지상군 전력 운용

통일 한국 지상군의 적정 규모는 배치된 부대, 작전적 예비대, 전략적 예비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지상군은 휴전선과 해안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예비대를 보유하여 항시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운용 개념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현 전시체제와 같이 항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병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통일 한국은 통일 후에도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3면의 바다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지상군 운용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상군을 운용한다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일 한국의 국경선 지역에서 지상군 운용은 중국의 무력행사에 대비 6개 군단 규모로 운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지상군 사령부를 북부사령부로 칭할 것이다. 북부사령부의 책임지역은 현재의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북부사령부의 지휘소는 평양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통일 한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상전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북부사령부는 국경선 및 서해안 지역에 3개 군단으로 사전에 적의 공격 예상 축선별로 병력을 배치하여 지역

방어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즉시 증원할 수 있는 작전적 예비를 2개 기계화군단 규모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양 일대에 북부사령부 지휘부와 1개 기계화군단 규모의 전략적 예비대를 운용하여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일 한국은 현 휴전선 남부지역에 2개 군단 규모의 남부사령부를 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중 1개 군단은 한반도 중앙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예비로 운용되는 기동군단이다. 전략적 기동군단은 분쟁 시 한반도의 어느 지역으로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머지 1개 군단은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운용되는 작전적 기동군단으로 도서지역 탈환, 대상륙작전, 대공정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육군은 8개 군단 규모 약 32만명 수준의 병력으로 운용될 때 방위충분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우리의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²⁶⁾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병대의 일반적인 기능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해병대는 해상이나 공중에서 해안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특수 목적군(Special Purpose Forces)이다. 해병대는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부대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기동군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해병대는 도서 탈환 및 방어 전담 부대이다.

특히 통일 한국은 독도 영유권 분쟁, 국경선 일대의 영토분쟁, 해양 관할권 분쟁, 해양 자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로 주변국들과의 국지전 및 무력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국과의 국지전 및 무력충돌에 대비하여 적절한 규모의 해병대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한국 해병대의 역할은 첫째, 주변국과의 국지전 또는 군사분쟁 시 상륙작전을 통한 해군전진 기지를 확보

26) 『국군조직법』 제3조 2항, 제14조 4항.

하고 해군기지 방호 등 해군작전에 따른 육상에서의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 국가 주요 전략도서를 방어하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신장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PKO, 재난구호, 국제분쟁 지역내 자국민 안전후송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작전과 해외국민보호 및 해외자산보호작전, 해외공관 등 주요 시설 경비 책임부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²⁷⁾ 도서지역에 대한 방어는 해병대 병력에 의하여 수행 될 수 있도록 해병대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통일 한국은 해병대를 도서 방어 전담 부대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해병대는 통일 후 한반도에서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 관할권 분쟁을 고려할 때 도서 탈환을 위한 가장 유용한 전력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해병대는 서해 5도를 포함한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필요한 도서지역 방어에 운용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해병대는 공지기동작전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바다를 통한 작전적 기동(OMFTS: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이나 ‘함·목기동(STOM: ship to objective maneuver)’과 같은 신속하고도 변화된 전략적 기동개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병대는 현재 보병사단 급 편성에서 공지기동여단 급으로 부대구조를 개편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보병연대를 보병연대 + 혼성비행대대로 편성하여 기동력과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²⁸⁾ 또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소요가 다변화되고 전장영역과 작전의 공간적 입지를 고려할 때 해병대가 효율적인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적임 부대이다. 따라서 해병대는 1개 연대 규모로 국제평화유지활동 전담부대를 운용하는 상비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해병대는 현재의 2개 사단

27) 변재윤, “통일 이후 한국 해병대의 역할과 발전방향”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 71-72.

28) 이정윤, 앞의 논문, pp. 97-108.

약 2만 9천명²⁹⁾ 수준에서 3개 사단으로 확대 편성하고 연대를 공지기동여단 급으로 개편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상군 운용은 중국과의 국경선 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효과적인 전력 운용 면에서 고기동·다목적 예비대를 보유하는 형태의 지상전력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최소의 전력이 소요될 것이다.

2. 해군 전력 운용

자국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에서의 역내 국가 간 해양분쟁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적, 해상테러, 마약밀수, 자연재해와 같은 초국가적, 비전통적 해양위협들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동북아에서의 주요한 갈등과 대립은 대부분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은 서태평양과 동·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중·일간 센카쿠 영유권 분쟁 사례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영토에 대한 분쟁이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북아의 주변국들은 자국의 해양통제력을 강화하고, 해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국가의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⁰⁾ 즉, 통일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중국·러시아는 해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³¹⁾

통일 후 한반도에 닥쳐올 위협의 축은 지상에서 해양으로 전환될 것

29)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39.

30)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공저, 윤석준 역, 『태평양의 붉은 별 : 중국의 부상과 미국 해양전략에 대한 도전』,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 5~7.

31) 김기주·손경호, 앞의 논문, p. 147.

이다. 이는 통일 한국의 안보가 바다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영토 수호 및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동북아 주변국들의 첨예한 대립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위협의 축이 지상에서 해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미래전쟁에서 무기체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감안할 때 어떤 경우든 전쟁이 우리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 한국 해군의 주 역할은 해양 방어를 통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즉, 통일 한국의 해군은 해양영토 수호,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 확보 등 국가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해양에서의 분쟁 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대양 해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³²⁾

통일 한국 해군은 근해에서 주변국과 도서 영유권 또는 해양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해양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근해에서의 주변국에 대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 혹은 중국과의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의 투입되는 함대와 함대결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에서는 지상과는 달리 방자의 이점에 의한 공자보다 적은 전력으로 방어하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방자의 이점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해상에서는 양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순수하게 투사된 전력의 대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통일 한국의 해군에 비해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주변국들과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 시 주변국들은 강력한 해양 전력을 투입하여 분쟁을 종결하려 할 것이다.³³⁾ 주변국들과 한국의 총 해군력

32) 김기환, “통일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 37-41.

을 비교해 볼 때 해양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³⁴⁾ 그러나 주변국들이 전면전을 위한 해양전력 투자를 기본 가정에서 배제했듯이 국지전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해양균형을 생각해 볼 때 해양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분쟁국은 보유하고 있는 총 해군력을 동시에 분쟁지역으로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해군 전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분쟁국과 상대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하고, 독립적인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의 형태는 ‘기동함대35’)이다. 기동함대는 전력투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상징성과 기동성, 융통성, 접근성, 그리고 독자적 작전 운용성이 높은 전력으로 연안에서의 해양통제와 근해에서의 상대적 해양균형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력 형태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해군은 단위전력으로 충분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으며 방호태세를 갖춘 기동함대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통일 한국이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 시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해군 전력은 1개 기동함대 전력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어도 해역의 해양 관할권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군사 분쟁 시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전력 또한 1개 기동함대 전력으로 판단하였다. 러시아와 해상에서의 군사 분쟁 시 소요되는 전력은 러시아가 무력 충돌이 아닌 무력시위를 위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1개 전대 규모에 대

33) 백병선, “한국의 해양안보위협 변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신 국방전략기침 발표 이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 12권, 제 3호(2012), pp. 37~77

34) 한국해군력은 총톤수 기준으로 중국의 16%, 일본의 3.3%에 불과하다.

35) 한국해군은 1989년부터 ‘전략기동함대’ 용어를 기획문서상에 사용하다가 1990년 중반 이후 주변국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전략’을 삭제하고 ‘기동함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응하기 위한 1개 전대 규모로 판단하였다.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 분쟁 시 소요되는 전력은 중국의 북해함대에 대응할 수 있는 1개 기동함대 전력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 분쟁들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의 전력은 1개 기동함대 전력이다. 그러나 어떠한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동함대의 전력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운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통일 한국과 주변국과의 군사 분쟁은 무력 충돌로 확대되기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과정들에 의해 해군력을 사전에 기동시켜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무력충돌은 짧은 시간 내에 종결되고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선 독도 관련 일본과의 분쟁과 이어도 관련 중국과의 분쟁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는 제주기지이다. 따라서 기동함대의 1개 전단은 제주기지에 배치하여 동해 및 서해로의 기동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1개 전단은 중국과의 국경선 분쟁 시 서해에서의 북해함대를 견제하고, 중국의 상륙예상지역인 청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해 평택을 모항으로 하여 목포, 평택, 남포기지에 1개 전대씩 분산 배치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개 전단은 동해 및 러시아와의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여 동해를 모항으로 하여 부산, 동해, 나진기지에 1개 전대씩 분산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때 현재 북한의 해군전력들도 적절히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효과적인 전력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잠수함 전력은 남한과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통합하였을 때, 북한의 잠수함이 낙후되었으나 수적인 면에서는 주변국의 잠수함전력 보다 충분히 상대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⁶⁾ 따

3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p. 236-239. 현재 동북아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은 능력을 배제하고 보유수로 판단하였을 때, 일본은 18척, 중국은 70척, 러시아는 64척이다. 반면에 현재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을 합하면 약 80여척이 된다.

라서 잠수함전력은 대한해협을 통제하면서 서해와 동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목포와 부산기지를 주 기지로 하는 전력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군 전력 운용

공군의 임무는 제공권(air superiority) 확보이다. 특히 속도와 기동력이 강조되는 현대전에서 제공권 확보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해 주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공군은 제공권 확보를 위해 방공·요격, 폭격·차단, 근접지원·봉쇄, 정보수집·감시·정찰, 수송·지원 등 5가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 전쟁사례들을 통해 볼 때, 공군은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미래전에서 공군은 항공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쟁의 승리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³⁷⁾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분쟁 시 통일 한국 공군과 중국 공군 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마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주변국들의 공군 전력 증강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 한국이 주변국과 마찰이 발생한다면, 공군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속도 및 융통성 측면에서 지상군이나 해군의 전력을 운용하는 것보다 공군의 전력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한·중 간 이어도 분쟁 등 해양에서의 분쟁 시 각 국은 공군을 최우선적으로 운용할 것이다.³⁸⁾

중국과 일본의 공군능력은 전투기 수량 등의 양적 우위보다 그들이

37) Philip S. Meilinger, "A Short History of Decisiveness", Airforce Magazine (October 2010).

38) 정진영·김영성·조관행, "동북아시아의 공군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 공군의 발전방향", 『신아세아』, 19권 4호 (2012년, 겨울), pp. 259-260.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갖추고 있는 CAISR+PGMs와 같은 체계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즉, 그들은 전략적인 투사, 감시 및 정찰, 정밀타격, C4I 등의 능력을 보유하여 공군 자체적으로 전략적 수준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은 현실적으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중·일과 비교하여 등가적 수준의 공군전력을 보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수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열세에 있더라도, 그들이 보유한 체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통일 한국 공군은 정보·감시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작전반경을 확대하여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한국 공군이 주변국가의 공군 전력과 상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단기간 내에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공군 군사력 건설은 무기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효과적인 공군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공군기지 건설을 동시에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군기지 건설이 현 공군전력의 작전반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공군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국경 분쟁과 이어도 분쟁, 러시아와의 해양자원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군기지를 추가로 신설하거나 기지조정을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적의 공군이 한반도 영토상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작전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공군기지가 내륙보다는 해안과 도서에 설치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시 공군의 작전반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에 1개 편대 규모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투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내륙지역에 배치된 전투기들을 독도와 최기지역의 기지로 조정하여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이어도 분쟁 시 공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이어도 분쟁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안보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륙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는 남해와 인접한 기지로 조정 배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국경분쟁과 러시아와의 북동해상에서의 해양 자원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공군기지를 운용하여 전력을 배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포와 함흥을 연하는 선 이북지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포, 함흥기지와 내륙에 2개의 기지를 운용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VII. 결 론

본 논문의 주제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이다.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되는 점은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분쟁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다. 지상군은 중국과의 국경선 지역에서 영토분쟁 시 소요되는 6개 군단과 기타 한반도 방위를 위한 2개 작전 및 전략 예비군단을 포함하여 8개 군단 규모의 32만 여명으로 판단하였다. 해군은 이지스함 6척과 구축함 12척으로 편성된 3개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1개 기동함대규모로 판단하였다. 공군은 전력증강에 예산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현 공군전력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기지 건설, 전투기 배치 조정, 전투기 성능 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병대는 평화유지활동 전담부대 및 도서방어 전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3개 사단 규모로 확대하되 연대를 공지기동여단 급으로 편성하는 것을 적정 군사력으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지상군·해군·공군의 군사력 운용과 건설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상군은 중국과의 국경선 지역에서는 지역방어와 대상륙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선지역을 제외하고는 고기동·다목적 전략 예비대를 보유하는 형태의 지상 전력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최소의 전력이 소요될 것이다.

해군은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시 상대적 균형을 달성하고, 독립적인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의 형태인 ‘기동함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군은 현실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중·일과 비교하여 등가적 수준의 공군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수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열세에 있더라도, 그들이 보유한 체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공군은 작전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공군 기지시설 및 기지 조정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군 전력은 병력의 수적 측면에서는 현재 한국군의 병력 수준보다 적게 요구된다. 그러나 해병대의 병력 수는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해군과 공군 전력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해군은 기동함대를 신설하고,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 나가야 한다. 셋째,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한국의 군사체제를 근간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체계는 호환이 되고

필요한 부분만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건설은 통일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준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위협과 통일 후 주변국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등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문 제목을 선정하고 연구를 하면서, 군의 고급 장교로서 통일에 대비하여 군에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은 욕심에 너무 광범위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분야가 아니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이 연구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한 답을 구해가는 연구가 아니라 다분히 연구자의 너무나 개인적이고 편협한 사고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자괴감도 있었다. 따라서 많은 가정 사항을 제시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며, 총력전이 아니라 제한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여기에는 주변국가들 중 어느 국가도 한반도가 한 국가에 속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 가정에서 출발한다. 둘째, 주변국과의 국지적인 분쟁 시 한미동맹군의 전력은 투사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가정을 설정하기보다 한 국가의 방위충분성은 독자적인 전력에 의해 구현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본 연구는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의 핵심은 방위력 건설을 위한 재원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방위충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전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연구함에 있어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통일 한국과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분쟁에 대한 가장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둘째, 적정 군사력을 판단하고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면서 북한군의 전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의 전력 위주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연구 하면서 한계점으로 느꼈던 사항들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연구 방향은 다음 세 가지 문제이다. 이는 본 연구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적인 연구가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을 연구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저강도분쟁 중 국지분쟁에서의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대적 균형전략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었다. 그러나 상대적 균형전략은 학문적인 접근으로 개념이 정리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 균형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에 대한 차원 높은 연구를 통해 이론이 정립된다면 통일 한국이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통일 한국과 주변국과의 군사적 분쟁 시 미국의 입장과 동맹군의 투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한반도 통일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주변국들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후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과 입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에 통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쌍무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 통일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군사 분쟁 시 미국이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 후 북한군과의 군사통합 시 구조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통합후 무기체계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가와의 교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 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력 건설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건설된 군사력이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통일 한국이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적 균형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주변국의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방위충분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 한국에 부합되는 군사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이러한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된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제시할 때 본 연구의 궁극적인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 대한 많은 군사전문가와 고급장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성과들이 집대성 될 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통일 한국의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국방대, 2005.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 기루찌 히로시, 국방대 역, 『戰略基礎計劃』, 국방대학원, 1992.
- 무라마에 모리미치, 『악의 논리』, 최현(역), 서울: 범우사, 1980.
- 이극린, 『정치학』, 서울: 법문사, 2000.
-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 전원하(역), 『저강도 전쟁의 이론과 실제』, 서울: 친구신서10, 1990.

2. 논문

- 김강녕, “방위충분성 전력의 건설과 향후과제”, 「전략논단」 2005년 봄 여름호 (통권 제2호),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5.
- 김기주·손경호, “다차원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제문제 연구」, 2013.
- 김기환, “통일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명수, “세력균형과 상대적 군사력 수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정수, “동북아 해양의 불안정요인과 한국해군의 전략적 대응방안”, 「해양전략」 제115호, 2002.

- 김태현, “세력균형이론”, 우철구의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2004.
- 대한민국육군, “통일대비군사력 건설방향 제정립”, 육군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 2000.
- 박광철,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과 적정 군사력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백병선, “한국의 해양안보위협 변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신 국방전략 지침 발표 이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 12권 제 3호, 2012.
- 변재윤, “통일 이후 한국 해병대의 역할과 발전방향”,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인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우리 해군의 대응 전략 및 전력 발전방향”, 해군전력분석 시험평가단, 2011.
- 이정운, “통일 이후 해양력 투사와 상륙전력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해병대전략연구소, 2006.
- 정옥임,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정진영·김영성·조관행, “동북아시아의 공군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 공군의 발전방향”, 『신아세아』 19권 4호, 2012.
- 최종철, “한국의 저강도분쟁 전략”, 「국방연구」 제42권 제2호, 서울; 국대원, 1999.

II. 외국문헌

- Dover Publications, “Dictionary of Spoken Russian: RussianEnglish”,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Inc, 1990.
- Kenneth N, Waltz, Man,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9.

-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Philip S. Meilinger, "A Short History of Decisiveness", *Airforce Magazine*, 2010.
- Reiner K. Huber, "Parity and Stability: Some Conclusions from Geometrical Models of Military Operations in Central Europe", *International Interaction, C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s*, 1991.
- Richard H. Solomon & Masataka Kosaka (ed.). *The Soviet Military Buildup In the Far East* (Dover, Massachu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 1985.
-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공저, 운석준 역, 『태평양의 붉은 별 : 중국의 부상과 미국 해양전략에 대한 도전』, 서울: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2012.

A Study on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Focused on relative balance strategy and conflict scenario)

Hong, Bong-Gi*

To prepare for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regarding Korean Peninsula after reunification, this thesis started off with the awareness that Unified Korea should build its international posture and national security at an early stage by determining its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independent defense and military strategies that Unified Korea should aim.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is 'The research on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To deriv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conflict scenario and relative balance strategy based on potential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and this is the part that differentiates this research from other researches.

First of all,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secure defense sufficiency. For this, this research will decide efficient military strategy that Unified Korea should aim. Than by presuming the most possible military conflict scenario, this research will judge the most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overcome the dispute. Second, after deciding

* Doctor's Degree in Military Studies, hong23737@hanmail.net.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this research will suggest how to operate presumed military strength in each armed force.

The result of this thesi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Unified Korea should aim 'relative balance strategy'. 'Relative balance strategy' is a military strategy which Unified Korea can independently secure defense sufficiency by maintaining relative balance when conflicts occur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This strategy deters conflicts in advance by relative balance of power in certain time and place. Even if conflict occurs inevitably, this strategy secures initiative.

Second, when analyzing neighboring countries interest and strategic environment after unification, the possibility of all-out war will be low i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no other nation wants the Korean Peninsula to be subordinated to one single country. Therefor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would be enough when Unified Korea can achieve relative balance in regional war or limited war.

Third, Northeast Asia is a region where economic power and military strength is concentrated. Despite increasing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conflicts and competition to expand each countries influence is inherent. Japan is constantly enhancing their military strength as they aim for normal statehood. China is modernizing their military strength as they aspire to become global central nation. Russia is also enhancing their military strength in order to hold on to their past glory of Soviet Union as a world power. As a result,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 gap between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and each neighboring countries is enlarged at an alarming rate. Especially in the field of air-sea power, arms race is occurring between each nation. Therefore Unified Korea should be equipped with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in

order to achieve relative balance with each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Fourth, the most possible conflicts between Unified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could be summarized into four, which are Dokdo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Leodo jurisdictional dispute with China, territorial dispute concerning northern part of the Korea Peninsula with China and disputes regarding marine resources and sea routes with Russia. Based on those conflict scenarios,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is as in the following. When conflict occurs with Japan regarding Dokdo, Japan is expected to put JMSDF Escort Flotilla 3, one out of four of its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Escort Fleet, which is based in Maizuru and JMSDF Maizuru District. To counterbalance this military strength, Unified Korea needs one task fleet, comprised with three task flotilla.

In case of jurisdictional conflict with China concerning Leodo, China is expected to dispatch its North Sea fleet, one out of three of its naval fleet, which is in charge of the Yellow Sea. To response to this military action, Unified Korea needs one task fleet, comprised with three task flotilla.

In case of territorial dispute concerning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China, it is estimated that out of seven Military Region troops, China will dispatch two Military Region troops, including three Army Groups from Shenyang Military Region, where it faces boarder with the Korean Peninsula. To handle with this military strength, Unified Korea needs six corps size ground force strength, including three corps of ground forces, two operational reserve corps(maneuver corps), and one strategic reserve corps(maneuver corps).

When conflict occurs with Russia regarding marine resources and sea

routes, Russia is expected to send a warfare group of a size that includes two destroyers, which is part of the Pacific Fleet. In order to balance this strength, Unified Korea naval power requires one warfare group including two destroyers.

Fifth, management direction for the Unified Korean military is as in the following. Regarding the ground force management, it would be most efficient to deploy troops in the border area with china for regional and counter-amphibious defense. For the defense except the border line with china, the most efficient form of force management would be maintaining strategic reserve corps.

The naval force should achieve relative balance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en there is maritime dispute and build 'task fleet' which can independently handle long-range maritime mission.

Of the three 'task fleet', one task fleet should be deployed at Jeju base to prepare for Dokdo territorial dispute and Leodo jurisdictional dispute. Also in case of regional conflict with china, one task fleet should be positioned at Yellow Sea and for regional conflict with Japan and Russia, one task fleet should be deployed at East Sea.

Realistically, Unified Korea cannot possess an air force equal to neither Japan nor China in quantity. Therefore, although Unified Korea's air force might be inferior in quantity, they should possess the systematic level which Japan or China has. For this Unified Korea should build air base in island areas like Jeju Island or Ullenong Island to increase combat radius. Also to block off infiltration of enemy attack plane, air force needs to build and manage air bases near coastal areas.

For landing operation forces, Marine Corps should be managed in the size of two divisions. For island defense force, which is in charge of Jeju Island, Ulleung Island, Dokdo Island and five northwestern boarder

island defenses, it should be in the size of one brigade. Also for standing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 it requires one brigade. Therefore Marine Corps should be organized into three divisions.

The result of the research yields a few policy implications when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First, Unified Korea requires lower number of ground troops compared to that of current ROK(Republic of Korea) force. Second, air-sea forces should be drastically reinforced. Third,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should be based on current ROK military system. Forth,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should start from today, not after reunification. Because of this, South Korea should build a military power that can simultaneously prepare for current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future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fter reunification.

The core of this research is to decid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realize relative balance that will ensure defense sufficiency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reat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should precisely be aware of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and decide minimum level of military strength that could realize relative balance in conflict situation. Moreover this research will show the path for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in each armed force.

Key Words : Threat-Based Planning, Defense Sufficiency, Relative Balance Strategy,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Conflict Scenario